

선거제 개혁 단일안, 관건은 비례 적용방식

여야 4당, 의원수 유지·지역구·비례 비율 3대 1 의견 일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비율 이견...민주 50%·3야 100% 주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공조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단일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지난날 말까지 몇 차례 회동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약속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3월 들어서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은 수시로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3일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한대로 선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3대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3명의 지역구 의원 수를 225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75석에 대해 연동형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의 과반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병립형으로 각 당에 적

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전체를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과 개혁법안의 '패키지(일괄) 처리' 추진도 쟁점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부패방지법 등 개혁 입법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동시처리 개혁 법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동시 추진하려면 최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협상안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에 100% 연동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개혁 입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

율을 50%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개혁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셈법이 다르지만,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 전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선거 실무 작업을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의 사람들’ 복귀 러시

임종석·양정철·백원우...여권 무게중심 당으로 이동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1기 내각 인사들이 속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면서 여권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지는 분위기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지난달 18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진 대표는 이번 주 중 이들과 만나 향후 당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전 실장에게는 남북관계 등 관련 경험과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당내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 중이다. 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이 대표가 제안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1기 내각에 합류

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개각과 함께 여의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의 내년 총선 예상 출마지역도 오르내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와 중구, 성동을 등이 거론된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부수석은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갑과 전북 익산이 예상된다. 윤영찬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은 충남 보령·서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서울 강서을, 대변인을 역임했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시험대 오른 ‘정치인 황교안’

이번주 당직 인선 발표...본격 당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당 대표 업무에 나서며 시험대에 오른다.

황 대표는 이번 주 초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고,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민생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오는 4일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하며 '황교안 체제' 구축을 본격화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들과 상견례를 한다. 또, 대표 취임 첫날인 지난달 28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한 데 이어 4일 오전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을 예정이다. 같은 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동시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 또한 모임에도 처음 참여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유시민 “북미 합의 가능성 더 커졌다”

유튜브 알릴레오...결렬후 배려·협상 진화 등 이유 꼽아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앞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이전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래에 더 큰 합의를 만들 자양분을 만든 결렬"이라고 하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라고 공



감을 표시했다. 유 이사장과 이 전 장관은 ▲북미가 회담 결렬 이후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과거보다 실무협상이 진화한 점 ▲북미 정상이 자주 만나 불신을 넘을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이런 평가의 이유로 꼽았다. 이 전 장관과 김 의원 역시 앞으로 북미 간 합의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오늘 국회 정상화 담판 ... 3월 국회 열리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개혁법안 등 현안 산적

민생 방치 국민여론 부담

두달여 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이번 주 중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한 데 이어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싸늘한 국민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은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의 개혁연기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대한 입법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으로 이 같은 민생법안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역점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국회, 이제 일 합니다 국회가 한우총 유치원 개혁 연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대책, 선거제 개혁 등 각종 현안을 다루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3일 오후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핵 담판 결렬로 파생된 한반도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

통령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

장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젠티(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젠티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젠티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